

박 대통령, 국정동력 확보 '협치' 시동

8일 여당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 오찬... 다음달 국회의원·상임위원장과 오찬도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달 중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오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협치를 키워드로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20대 국회의와 상관계 의미가 있는 일련의 '식사정치'를 통해 당청 결속도를 높이는 한편, 19대에서는 압박 일본도였던 대(對)국회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란 얘기다.

5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8일 새누리당 129명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 것은 지난해 8월26일 오찬 이후 11개월 만이다.

당시 오찬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당청이 하나가 돼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다짐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번 오찬은 20대

국회의 출발선에서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당과 청와대가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와 국정전반에 걸친 의견들이 개진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혁신으로 새출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협력을 당부하는 등 진지하고도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를 언급한 뒤 청와대의 당이 한 몸이 돼 정책공조를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대책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완수 등에 있어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뒷받침도 당부할 전망이다.

이번 오찬은 새누리당이 4·13 총선 참패 직후 책임론 공방과 혁신위원회 출범

무산, 유승민 의원의 복당 등을 놓고 극심한 내분을 겪었던 만큼 '집안 단속' 차원에서 향후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다짐을 얻어내는 자리로도 풀이된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여서 당내 분열을 막고 통합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당청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적극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키워가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놓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박 대통령으로서 당의 단결과 청와대와의 '할렘공조'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여당과 정부를 수레 바퀴에 비유하며 "어쨌든 계속 서로 협의를 해 가며 같이 굴러가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며 당청간 원활한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다음달 중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동과 20대 국회 개원연설 등에 이은 협치 행보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 것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4월1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초 청와대는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 하루 전인 오는 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초청했다가 일정 조율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오찬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회의와 협치 행보의 일환이라는 의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이번 오찬에서 야당도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국정 현안에 있어 여야의 목소리를 모두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전망이다. /뉴스



이현숙 도의원, 민중연합당 입당

전북도의회 이현숙(무소속, 비례) 도의원이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

이현숙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함께 진보정치의 싹을 틔우기 위해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계급계층 연합정당인 민중연합당에 입당하고자 한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제 더는 정치를 소수 1% 권력층이나 가진 자, 엘리트층에게 위탁할 수 없다"라며 "민중연합당과 함께 99% 노동자·농민·청년 등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정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고와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 농성파탄으로 눈을 짓는 농민들이 있는 곳, 서민들이 있는 곳을 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도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의원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도의원으로 복귀했다. /신평영 기자

국민의당-새누리당 고성·막말 '추대'

김동철 "저질 의원 창피"... 이장우 "당신같은 사람 처음봐"

여야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5일 막말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으로 촉발된 고성과 막말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도중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인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총리의 인사는 영남출신의 경우 역량이 있어 인사를 시켰고, 다른 지역은 역량이 부족해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 여기 앉은 국무위원 중에도 각계의 분들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관, 차관 등 권력기관장 거의 다 영남출신 아닌가"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저도 우선 영남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러자 방청석에서 김 의원의 질의를 문제삼으며 소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그럼 대량평 인사를 하지 말란 말이야", "지역편중 인사 안 하겠단 말을 왜 했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는 계속해서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한심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가만히라도 있어야 가만히라도 이은재 의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 "왜 이름을 불러요. 질문만 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등 고성이 쏟아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전시민에게 사과하세요. 어디 대전시민에게 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때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의원을 진정시키고 있다. 박원주 국회의부장은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고"라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이장우 의원은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질문할 거니까 간섭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김 의원은 또 "저질 국회의원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청석에서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태도 심각해졌다. 김 의원은 "왜 간섭을 하세요. 가만히 듣고 계시지. 누가 먼저 도발했어", "올화통이 터져 죽

겠다"는 등 막말을 멈추지 않았다. 상황이 커지자 의사봉을 잡고 있던 박원주 국회의부장이 중재에 나섰다. 그래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박 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정회를 선포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됐다. /뉴스

김관영, 군산 자봉센터 신축 특고세 10억 확보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올해 필요예산 약 30억원 중 부족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6월 착공을 했으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시민 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은 "자원봉사자센터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일석이조 센터"라며 "지역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줄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명예의 전당'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평영 기자

더민주 최형재 전주를 위원장

중앙당의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 유감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를 위원장이 중앙당의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에 유감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5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방관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의 전주를 지역 경선 결정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해 당과 당원들에게 큰 빛을 지었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끼리(본선 패배자, 경선 패배자) 경선을 한다면 당원과 시민들에게 미안한 일이 된다"고 반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조강특위에서 제시한 ▲3등으로 낙선한 지역 ▲여러번 낙선한 지역 ▲당표표를 대비 후보표표율이 낮은 지역 정밀심사 평가기준 대상에 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해당되는 지역도 단수후보가 되었는데 경선을 하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번 경선실시가 허위사실 유포 때 문이라고 이상지 전 의원측을 겨냥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이 전의원측과 더민주당 전주를 도의원, 시의원 일동명의로 4.13 총선 당시 최형재 후보 음성녹음 ARS 불공정 경선 주장 문건이 조강특위에 제출됐다"면서 "하나같이 침소봉대되었거나 허위사실이다. 정치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명하고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허위사실 유포와 갈등유발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것이고 이 전의원의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면서 "앞으로 두건의 처리 방향을 보아가며 경선 참여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민주당은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복수 신청된 전주와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4개 지역구 가운데 전주를 김제부안 만 당원경선을 치른다. /신평영 기자

더민주 '한상균 실행 재판부 자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민중총궐기대회는 몇 만 명의 시민이 모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청년실업,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뉴스

이도영 도의원 상임위 재배정 관심

친형이 환경회사운영해 환복위에서 제외가능성 커

전북도의회 이도영 의원(국민의당, 전주 2)의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을 짚으려한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 재배정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까지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해 단단히 버리고 있는 탓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해도 '공명률'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 35조 등에 따라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고 또한 조례에 안전성의 등이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규정이 존재하는 한 이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재배정될 것인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예컨대 지난 2014년 정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도 당초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정받았지만 직무와 연관된 건설업

관련 주식을 갖고 있어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교체됐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도정을 감시할 의원들이 일부분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이유와 배치된다는 게 지방자치 전문가와 시민사회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럴 경우 도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정 대부분은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데, 도의원 직계가족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아 환복위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직계가족과 연계되는 상임위 배정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도영 의원은 친형이 'S' 환경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평영 기자

전주시의회 의장 김명지 의원

부의장에 송상준 의원 선출

전주시의회는 제10대 후반기 의장에 김명지 의원(인후3, 우아·2동), 부의장에 송상준 의원(송천2·팔복·조촌·동산동)을 각각 선출했다.



김명지 의장



송상준 부의장

시의회는 5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4명의 의원이 참석한 의장선거에서 22표를 얻은 김명지 의원을 의장으로, 22표를 얻은 송상준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지 의원은 재직 의원 34명 중 21표를 얻어 13표에 그친 김남규(송천1동)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도 더민주 송상준 의

원이 34명 중 22표를 얻어 12표에 그친 국민의당 김운철(중앙·풍남·노송동)의원을 제쳤다.

신임 김명지 의장은 "시민과 소통하며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역의 선도자로서 시민들의 행복을 실현해가는 전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송상준 부의장은 "의회의 화합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